

2016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2017. 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100%	S
90% 이상 ~ 100% 미만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50% 이상 ~ 60% 미만	E
50% 미만	F

[평가등급 현황]

1 연구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	등급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input type="checkbox"/>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 등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B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 의심 여부	S
1-2. 국가정책 지원 성과	1-2-1. 연구기관의 정부과제 지원 성과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수행 연구·사업 실적과 성과	B
		<input type="checkbox"/>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 정도	B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C
	1-2-2. 연구과제의 정책수립 지원 성과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정책수립 기여도 <input type="checkbox"/> 선도과제의 정책수립 기여도	A
1-2-3. 정책 집행사업 지원 성과	<input type="checkbox"/>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input type="checkbox"/>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우수 우수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수행 및 협동연구 추진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 선정·수행의 적정성	B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체계 및 실적의 우수성	A
	1-3-2.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C
		<input type="checkbox"/> 정부 3.0 추진 성과 정도	B
1-3-3. 연구역량의 국제화 정도	<input type="checkbox"/> 연구역량의 국제화 정도와 성과	B	

2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	등급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2-1-1. 리더십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와 대내·외적 소통 능력	B
		<input type="checkbox"/> 윤리경영	B
	2-1-2. 책임경영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C
		<input type="checkbox"/> 책임경영 이행 정도	C
	2-1-3. 자율지표	<input type="checkbox"/> 기관장 중점 추진과제1	B
		<input type="checkbox"/> 기관장 중점 추진과제2	C
2-2. 조직 및 인적 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B
		<input type="checkbox"/> 조직 구성원의 역량 및 인사관리 적정성	C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B
	2-2-2. 노사관계 선진화	<input type="checkbox"/>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C
2-2-3. 복리후생 운용의 합리성	<input type="checkbox"/>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실적 정도	S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E
	2-3-2. 보수체계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S
		<input type="checkbox"/> 결산잉여금 처분 및 퇴직급여충당금 편성·집행의 적정성	S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정성	F
<input type="checkbox"/>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효과	S		
2-4. 감사 및 평가 결과 개선 정도	2-4-1. 내·외부 감사결과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input type="checkbox"/>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B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B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E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A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S
		<input type="checkbox"/> 휴가장려 및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운영의 적정성	A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전환 정도	A

총 평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분야]

- 계량적 분석으로 객관적인 분석 및 결과를 제시하였고 적절한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기존의 제시되었던 정책들을 반복하는 것보다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계획도 같이 수립해야 함.
- 주파수 경매를 통한 약 2.1조원의 경매 수익 창출에 정책적으로 기여, 통신비 경감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정과제관련 연구들이 정책으로 반영됨.
- ICT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과 다가올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함.

- 기본/일반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체계적인 내 외부수요조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자문을 기본연구과제 선정 관련 규정에 반영함. 그러나 기본/일반연구과제 발굴 관련, 1차 선정과제에 대한 적절성 심의는 심의 후 선정에 이르는 기간이 길고 선정비율도 낮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함.
- ‘수시연구과제 관리지침’에 연구과제 선정 시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시연구과제 발굴, 선정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하지만 정부부처의 요구 외에 기관에서 급변하는 환경적 변화에 따른 정책요구에 부응하는 수시연구과제의 발굴 실적은 없음. 향후 과제발굴 시 정부부처 외에 내부 및 외부(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로부터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함.
- 협동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려책이 잘 구축되어 있으며, 연구사업 추진 및 참여연구원의 역할 분장도 협동연구사업의 취지에 부합함.
- 지식자산 보호전략을 수립하고 고객수요에 부합하는 연구성과 확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여 정보전달의 시의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고객에 대한 타겟그룹의 세분화·유형화와 함께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연구성과 확산효과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나 해외 언론매체를 통한 연구성과 확산노력이 요구됨. 정부3.0에 대한 구현 노력을 보이고는 있으나 우수사례의 벤치마킹 결과를 연구원에 적용·확산하거나 지역 및 국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하는 방식 혁신 등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오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함.
- 연구역량 국제화 관련 중장기 추진전략을 마련하였고 해외파견형(Out-bound형) 인력교류의 장기화를 실행하고 있고 국제화전략위원회를 통해 연구역량 국제화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국내체류형(In-bound형) 인력교류의 확대방안 마련과 함께 해외파견형 파견기관의 다변화가 요구됨. 이 밖에도 연구역량 국제화 모니터링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함.

[경영분야]

- 현안문제 타개를 위한 노력으로 정부부처와 ICT 신성장동력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구성원의 연구역량 및 성과관리 증진을 위해 문제점 인식 및 내부진단, 추진전략수립 및 전략수행의 단계적 전략 수립 등 체계적임.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사전예방교육, 자체검증시스템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은 적극적임. 다만 기관의 재정상황 등 실질적인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노력은 부족함.
- 현안 대응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미래지향적 연구를 기관장이 의지를 가지고 강조하였고, 한국정부의 ICT 글로벌 협력 활동 지원이 적절하였음. 실간 평가를 트고 실

장의 정성적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주니어 인력도 공평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마련하여 성과의 차별화가 가능하게 됨. 그러나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임금체불 사태 발생으로 인해 소속 박사 등 인력의 사기저하를 막지 못했음.

- 벤처·창업 생태계 글로벌화를 위한 자문단의 구성원을 주제별, 주체별 분과로 구성하고, 산·학·연·관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다양한 자문과 전문적인 개선에 노력하였음. 또한, 가구패널조사 CAPI 방식 도입, 데이터 검수 강화, 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방송산업실태조사 등 자체 생산 통계의 관리를 강화하여 통계생산 역량 강화를 수행한 실적이 인정됨. 향후 더욱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ICT 통계생산을 위한 환류체계의 점검 및 소속 연구원과 기관장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전략 수립 및 실행이 요구됨.
-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운영 변화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안대응조직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유관기관과의 활발한 네트워크활동을 하였으며,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인력운용을 하고 있음.
-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통해 중장기 교육훈련 로드맵을 도출하고 교육프로그램에 연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기관 구성원의 직급·직종별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개인업적평가 우수기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평가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업적평가시스템 시행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노력을 보임.
- 재정상황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동결에 합의하였고, 노무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노무정보를 각종 협의체나 게시판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으며, 원장-사무국장-노조지부장 간 수시적 의견교환을 통해 노사협의회 미구성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고 있음. 노사협의회의 미구성,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한계, 노무교육의 내용 및 환류체계의 미흡성, 수평상향식 소통체계의 위축에 따른 제반 문제점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 각종 규정을 확인한 결과 체크리스트 위반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나, 보다 강화된 사전 및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 가동될 필요가 있음(타기관 대비).
- 2016년도 중점연구과제, 연구사업비 및 연구개발적립금 사업은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과 집행에서도 투명성을 유지함. 단지 연구사업비 중 기본과제, 수시연구사업비 및 연구개발적립금의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총인건비 규모 및 인상률, 결산잉여분 처분 및 퇴직급여충당금 편성·집행이 적정함. 성과연봉이 총 연봉 대비 적정한 기준을 유지하며,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기준도 적정하게 설계됨. 또한 임금피크제 정착과 운영에 있어 정부권고안을 준수함. 하지만 기

본연봉의 누적식 전환과 차등지급률 기준도입이 요구되며, 임금피크제로 인한 중장기 신규채용에 따른 소요재원 충당에 대해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됨.

- 정무위원회(연구중단자에 대한 부적절한 경비지원), 예산결산위원회(국외업무여비 편성 규정 미준수 및 과다 편성)의 지적사항을 개선하였음. 감사 전담 인력 2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상임감사의 원장과의 분기 1회 업무협의를 수행한 실적이 확인됨. 그러나 전체 직원 대상 감사 교육이 주로 ‘안내’, ‘게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 집합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휴가장려 및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은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으나 활용실적은 낮은 편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안내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고용은 정부권장기준을 일부 준수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신규 채용 노력과 안정적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실적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청년인턴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제공하고 청년인턴 내부채용에 대한 우대조항을 명문화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I

연구 분야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 등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장 점〉

-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관련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한 것은 의미가 있고 향후 출연연의 연구방향 설정에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 계량적 분석으로 객관적인 분석 및 결과를 제시하였고 적절한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음.
- 지능정보사회 관련 연구의 경우 새로운 미래를 위한 주제를 선정하고 외국의 입법 사례를 잘 분석하여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은 우수한 사례임.
- 국내·외에서 제시된 적이 없는 모호성을 도입한 이론 모형 개발 및 온라인 실험을 실시하고 분석하여 모형과 부합하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함.

〈단 점〉

- 해외의 자료를 분석하여 반영한다고 하였으나, 해외자료의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재함.
- 과학기술과 ICT에 관한 연구는 ICT 중심으로만 분석이 이루어지고 과학기술연구개발 부분은 피상적으로만 다루고 있음.
- 일부 연구들의 경우 정책방안이 단기적으로는 실현가능하지만, 이미 기존에 제시된 바가 있어 참신한 정책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정책대안들이 실현가능한가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 설문조사를 사용한 연구에서 조사비용의 제약과 설문의 높은 난이도로 인해 응답수

가 적었던 것은 분석과정의 한계를 보여준다 할 수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거시적 분석의 틀을 통해 도출된 정책방향성은 명확하나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아직 개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추후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는 등의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년도 연구과제는 총 연구기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제시되었던 정책들을 반복하는 것보다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계획도 같이 수립해야 함.

1-2 국가정책 지원 성과

1-2-1. 연구기관의 정부과제 지원 성과

□ 국정과제 수행 연구·사업 실적과 성과

〈장 점〉

- 기본연구과제 및 수시연구과제의 기획 프로세스가 명확히 제시됨.
- 주과수 경매를 통한 약 2.1조원의 경매 수익 창출에 정책적으로 기여, 통신비 경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정과제 관련 연구들이 정책으로 반영됨.
- 과제의 발굴과 선정과정에서 국정과제 연계성을 고려하는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기술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제도 개선방안 연구는 콘텐츠에는 차이가 없으나 전송기술별(예: 케이블, IPTV 등)로 상이한 규제로 인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 연구의 의의가 큼.

〈단 점〉

- 국정과제의 특성을 고려한 조직이나 절차를 별도로 구비하고 있지 않음.
- 국정과제 관련 참여 및 지원 실적이 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집중됨.
- 기본적인 중립성 논의의 틀은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함.

〈개선 및 건의사항〉

- ICT융합과 관련하여 논의를 서비스차원을 넘어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 정도

〈장 점〉

- 정부의 다양한 현안과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였으며, 특히 다양한 현안관련 대응들이 법제화 되거나 정부의 정책에 반영됨.
- 현안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였음.
- 현안과제에 대한 국가기관의 긴급 및 수시요청에 적절히 대응하였음.

〈단 점〉

- 대상 정부부처의 범위가 주로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국한되어 있음.
- C&D(개방형 연구개발)의 경우 자칫 수탁과제 수행을 위한 수요조사의 측면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부부처에 제시하는 것보다는 정부부처의 주도권에 의해 학계·산업계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선제적 대응이라는 것이 며칠, 몇 달 앞선 것이 아닌 연구원 차원에서의 오랜 기간 노하우 축적을 통하여 정부에게 제시한 현안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정보통신이 한국의 미래를 열어 나갈 산업과 지식 체계라는 점에서 창의적인 국가적·사회적 이슈발굴을 통해 다양한 부처에게 현안과제를 제시하고 선도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장 점〉

- 구체적인 결론 또는 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담반, 연구반 등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등과 협력하고 있음.

〈단 점〉

- 국회와의 협력은 참여에 그치고 있음.
- 협력대상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편중되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협력대상기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ICT 융합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비스 발전 및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타 연구기관들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융·복합 연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1-2-2. 연구과제의 정책수립 지원 성과

□ 연구과제의 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정보통신환경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평가대상인 7개 연구과제 모두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정책활용도가 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대안의 정책화과정이 다양하고 심도 있게 이루어짐으로써 연구과제의 정책수립 기여도가 우수함.
- 특히 ‘우체국 MVNO위탁판매사업의 소비자 효용증대 효과 추정’은 우체국 신사업에 대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증명하여 사업 추진 타당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연구계획서 대비 정책 기여도의 달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됨.
- ‘지상파 다채널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는 제안된 내용이 방송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는 등 정책대안의 정책화실적이 우수함.

〈단 점〉

- 대부분의 과제에서 사회적 또는 행정적 파급효과를 제시할 때 내용의 실증적 근거나 구체성이 다소 미흡하여 실현된 파급효과의 정도를 예상하거나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정책화과정에서 이용자 의견수렴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방송통신 결합판매 규제 개선방안 연구’는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대안의 도출과정 및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이용자 의견수렴에 보다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정책대안의 정책화실적이 타기관에 비해 법률의 제·개정에 이르는 사례가 다소 낮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파급효과를 제시할 때 가능하면 실증적 근거에 입각하여 계량화하여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연구종료가 오래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종료 이후 나타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성과를 정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정책화과정에서 전문가집단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의 비중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 입법안의 경우 외부 요인에 의해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거나 폐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이에 따라 연구결과가 정책화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지체되거나 무효화되는 상황이 빈번함을 고려할 때 파급효과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선도과제의 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평가대상인 2개의 선도과제 모두 주제의 독창성이 있고 새로운 지식이나 정책의 실현 정도가 높으며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우수하여 선도과제로서 정책수립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됨.
- 특히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체계 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는 인공지능, 로봇 등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기존 인간중심의 규범체계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 상황에서 지능정보사회 규범체계 정립방향을 단기·중장기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으며, 연구결과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안)’에 반영되고, ‘(가칭)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원칙 및 주요내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도과제의 우수성이 높음.
- ‘ICT분야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방안 연구’는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높은 클라우드펀딩에 대한 초기 연구로, 실효성 높은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개정안 입법에 기여하였고 여러 차례 정책자료 작성에 참고자료가 되었으며, 후속 연구 및 정책방안 수립에 크게 기여함.

〈단 점〉

- 사회경제적 갈등비용 감소와 같은 경제적 효과나 정책효율성 증가와 같은 행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내용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여 파급효과의 실현가능성이나 실현 정도를 평가하기에 제약이 있음.
- 특히 ‘ICT분야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방안 연구’는 2013년 종료된 연구인데 제시된 파급효과가 지나치게 간략하고 추상적임.
-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체계 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는 중장기 연구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단기적 정책방안이나 정책화 실적에 경도되거나 주로 인공지능기술

중심의 논의로 전개를 함으로써 연구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킨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개선 및 건의사항〉

- 선도과제의 경우 다른 연구과제보다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실증적 근거에 입각하거나 계량화하여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연구종료가 오래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종료 이후 나타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성과를 정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지능정보사회 관련 중장기 연구과제의 경우 단기적 정책화 실적이나 성과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음.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하락함. 기본연구가 전년 대비 대폭 하락하였으며, 정보제공 또한 전년 대비 하락함. 상세업무별로는 육성 및 축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보제공, 수탁연구, 기본연구 순임.
- 정부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평균 대비 높은 수준임. 수탁연구가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육성 및 축진, 정보제공이 전체평균 대비 큰 폭으로 높게 나타남.
- 구성모형별 KCSI-EHS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상세업무 유형에서 육성 및 축진의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높음.
- 세부항목별 분석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업무/연구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물’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연구결과와 사회적 공유 및 성과 확산 위해 노력’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수탁연구의 경우 ‘연구과제의 안내/문의/협의를 위한 담당자 접촉 용이’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연구결과와 사회적 공유 및 성과 확산 위해 노력’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정보제공의 경우, ‘기관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정보 제공’, ‘사명감을 가지고 정보제공 업무 수행’ 등의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정보제공을 위한 온·오프라인 채널 구비’, ‘해당분야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등의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육성 및 축진의 경우, ‘기관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포럼, 세미나를 개최·운영’, ‘사회적 사명감을 가지고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운영’ 항목의 점수가 높게 나타남.
- 업무유형별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연구과제 수행’에서 고객이 전문 인력 및 조직

이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부의 과제에서 고객이 느끼는 문제인지, 기관 전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느끼는 문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임. 고객과의 소통 및 접촉 부족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산·학·연 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하락함. 기본연구, 육성 및 축진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수탁연구가 전년 대비 대폭 하락함. 상세업무 별로는 기본연구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위탁/공동연구, 정보제공, 육성 및 축진 순임.
- 산·학·연 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평균 대비 높은 수준임. 기본연구, 위탁/공동연구, 육성 및 축진, 정보제공이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남.
- 구성모형별 KCSI-EHS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상세업무 유형에서 기본연구, 위탁/공동연구에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높으나, 수탁연구에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세부항목별 분석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국가 및 사회에 유익한 연구결과물’ 항목이 점수가 높은 반면, ‘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해당분야의 정책적/학문적 발전 선도’, ‘연구결과물의 사회적 공유 및 성과 확산 위해 노력’ 항목이 낮은 점수로 나타남. 수탁연구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책임감 보유’ 항목이 점수가 높은 반면, ‘업무/연구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물’,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항목이 낮은 점수로 나타남. 위탁연구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책임감 보유’ 항목이 점수가 높은 반면, ‘고객의 입장 이해’ 항목이 낮은 점수로 나타남. 정보제공의 경우 ‘기관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정보 제공’ 항목이 점수가 높은 반면, ‘고객문의 및 건의사항 전달 위한 담당자 접촉 용이’ 항목이 낮은 점수로 나타남. 육성 및 축진의 경우 ‘기관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포럼, 세미나를 개최 운영’ 항목이 점수가 높은 반면, ‘포럼, 세미나 운영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항목이 낮은 점수로 나타남.
- 업무유형별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육성 및 축진’에서 현재 소통 창구에 대한 고객의 접근성, 활용성, 편의성 등을 우선 점검하고 고객과 소통한 내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또한 주기적으로 수집되는 의견의 양, 내용 등을 기관 차원에서 모니터링하여 각 사업 단위에서 고객 의견을 경청하고자 하는 노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3

연구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수행 및 협동연구 추진의 적정성

□ 연구과제 선정·수행의 적정성

<장 점>

- 기본/일반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체계적인 내외부수요조사 체계를 갖추고 있음. 외부 위원을 포함한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실별로 예비과제선정 단계를 갖추고 있음.
-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자문을 기본연구과제 선정 관련 규정에 반영하여 외부의 견 수렴을 강화하고 있음.
- ‘수시연구과제 관리지침’에 연구과제 선정 시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시연구과제 발굴, 선정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 연구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함.
-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연구과제 추진단계별로 평가결과를 관리하는 등 연구과제 성과관리체계가 잘 운영되고 있음.
- 연구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아 세밀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음.
- 연구실별 독립적인 연구선정회의를 개최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선정함.

<단 점>

- 일반과제의 발굴이 내부제안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더 필요함. 기본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은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연구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어 선정의 개방성이 요구됨.
- 기본/일반연구과제 발굴 관련, 1차 선정과제에 대한 적절성 심의는 심의 후 선정에 이르는 기간이 길고 선정비율도 낮아 효율성이 떨어짐.
- 수시연구과제 관련, 정부에서 요청하는 시급한 현안 위주로 2과제만을 수행함. 정부 부처의 요구 외에 기관에서 급변하는 환경적 변화에 따른 정책요구에 부응하는 수시연구과제의 발굴 실적은 없음.
- 수시과제의 발굴 및 선정 시 유사 중복성을 검토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 있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체계적인 수요조사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기본/일반과제 발굴과정에서 외부제안과

제를 적극 수용하고, 선정과정에서도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제 선정의 개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수시과제에 대한 과제 발굴을 정부부처 외에 내부 및 외부(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로부터 다양하게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실별 연구선정회의 구성에 있어서 외부위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부처와 학계 외에 산업계와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년도 중심의 일반과제 경우, 기본연구과제와 차별화하여 과제발굴에 있어서 상향식(Bottom-up) 방식과 하향식(Top-down) 방식을 적절하게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시스템 도입을 권고함.
- 정책제안서, 이슈페이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성과 활용 확산 노력을 강화하여 연구성과의 정책적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연구성과 관리체계를 기본연구/일반연구와 수시연구에 대해 차별화하고, 관리체계를 가능하면 연구수행 관리, 연구수행 평가, 연구성과 관리 등으로 범주화한 후 각각의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의 구축을 권고함.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체계 및 실적의 우수성

〈장 점〉

- 경영목표 실천과제로 ICT 생태계의 수평적 연구협력 강화에 협동연구 장려를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함. 협동연구 협력기반을 국내외적으로 잘 구축하고 활성화하고 있음.
- 자체과제 수 대비 83.3%, 수탁연구과제 중 50.5%를 협동연구로 수행하고 중장기 협동연구과제를 기획·추진하는 등 협동연구과제 수행에 적극성을 보임.
- 연구비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 협동연구는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 협동연구 3개 과제는 협동연구를 통한 시너지 제고를 위해 정책기여 확대, 연구결과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협동연구를 수행한 것이 돋보임. 평가자료에서 협동연구 기관 간 상호협력 내용을 잘 제시하고 있음.
- 협동연구 취지에 부합하는 연구사업 추진 및 참여연구원의 역할 분장도 적절히 잘 되어 있음.
- 협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음. 아울러 전 직원 연찬회, 확대간부회의 등에서 우수 협동연구과제 포상, 우수 사례발표 및 공유 등 환류를 통해 직원들의 협동연구 수행을 적극 장려함.

〈단 점〉

- 협동연구 점검 및 평가는 위탁연구 위주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책임연구자의 협동연구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한 노력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규정은 미비함.
- 산학연 협동연구진의 구성에서 기본/일반과제의 정부/공공 분야의 참여 비중이 4.9%로 낮음.
- 협동연구 참여기관의 담당 및 역할 중 설문조사 등은 일반 용역의 성격이 강하며 협동연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각 과제별 성과 및 시너지에 대한 기술내용이 협동연구를 통한 성과라기보다는 단순 외부위탁연구사업을 통한 성과(결과)로 보임. 아울러 원내외 연구진 상호간의 협력 내용 및 그에 따른 결과 및 시너지가 모호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산·학·연 협력과 협동의 취지를 엄밀하게 구분하고 협동연구의 취지에 맞는 연구 개발과 수행관리를 위한 체제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회에서 규정한 인센티브제도 외에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원들의 협동연구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포상 및 인센티브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산·학·연 협동연구진 구성에서 각 분야의 비중을 적절하게 구성하여 협동연구진 구성의 균형을 맞추어 운영할 것을 권고함.
- 협동연구의 내용 중 협동연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용역을 활용하는 등 내용의 적절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함.

1-3-2.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장 점〉

- 지식자산 보호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동 전략에 따라 현황 점검, 관련 규정 개정, 직원 교육의 체계적으로 추진함.
-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1회 실시하여 홈페이지 개선에 반영하였고, 고객 수요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인 연구성과 제공 및 부서별 특성에 따른 홍보확산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함.
- 연중 이슈페이퍼를 발간하여 정보전달의 시의성을 제고하였고 4종의 영문홈페이지 운영과 8종의 해외언론 및 해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성과를 해외로 확산함.

〈단 점〉

- 홈페이지, 통계포털, ERP 등 다양한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간 연동이나 효과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미흡함.
- 고객관리부분에서 고객에 대한 타겟그룹이 모호하고 타겟그룹별로 연구성과를 확산하는 데 유용한 홍보수단 간의 정합성 문제가 있음.
- 웹(Web), SNS, 트위터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 활용으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수집, 분석, 환류시스템 마련이 미흡함.
- 8종의 해외언론 및 해외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연구 확산에서 절반은 약소국가(우즈벡, 몰도바, 파라과이, 에콰도르)로 확산효과가 낮음.
- 국민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성과 확산과 관련하여 타겟그룹이 모호하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지식자산 정보시스템 구축과 발전방안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함.
- 지식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오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세분화된 정책고객을 분류하여 맞춤형 성과확산과 주요 언론사와 협업하여 특집기사나 시리즈 기획 등 지속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연구성과물 배포와 관련하여 국외홍보자료의 발간을 확대하고 비정기간행물의 발간 종류를 보다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국민이나 지역사회에 대하여 타겟그룹을 유형화, 세분화하여 맞춤형 홍보 강화가 필요함.

□ 정부3.0 추진 성과 정도

〈장 점〉

- 기관장 관심 및 방향 제시, 변화관리 교육 및 훈련,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구성원 간 신뢰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3.0 추진계획’을 수립함. 그리고 담당부서를 지정 및 관리함.
- 다양한 기관 간 협업, 정보공유를 실시하였고, 정부3.0 확산을 위해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개선함.
- 정부3.0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변화관리 전담팀을 운영하였고 연말에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단을 운영함.

-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한 실적이 보이고, 사전정보공표를 개선함.

〈단 점〉

- 조직 내 일하는 방식 개선 혁신(조직문화 혁신 포함)에 대한 성과가 미흡함.
-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이를 연구원에 적용·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미흡함.
- 국민맞춤서비스 추진사례와 관련하여 타겟그룹을 세분화, 유형화하여 타겟그룹 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취약함.
- 고수요, 고가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민간의 부가가치 창출 지원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일하는 방식 혁신사례의 경우 조직 내 협업, 소통, 개방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과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이를 연구원에 적용·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국민맞춤서비스와 관련하여 타겟그룹을 세분화, 유형화하여 타겟그룹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음.
- 고수요, 고가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민간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1-3-3. 연구역량의 국제화 정도

□ 연구역량의 국제화 정도와 성과

〈장 점〉

- 연구역량의 국제화 제고를 위하여 ‘중장기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고, 동 전략에는 연도별 세부추진과제를 포함하여 성실히 실행함.
- 해외파견형(out-bound형) 인력교류 4인(’15년, ’16년)이 장기교류라는 점이 우수함.
- 연구역량 국제화 성과를 분야별로 모니터링하여 구체적인 성과 제시함.
- 연구자들로 구성된 국제화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PLAN-DO-CHECK-ACT를 기준으로 과정별,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 후 환류 하는 시스템을 마련함.

〈단 점〉

- 국내체류형(in-bound형) 인력교류는 전혀 없고, 해외파견형(out-bound형) 인력교류는 2명 모두 미국 대학으로 파견함.

- MOU가 어떻게 실질적 연구국제교류, 해외공동연구, 국제세미나 등으로 진화해 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소 미흡함.
- 공동/수탁연구는 6건으로 전년도의 12건에 비해 감소함.
- 성과평가를 연구자들로 구성된 국제화전략위원회에서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연구원 차원에서 실질적인 국제역량 제고를 정책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현행 중장기 추진전략은 2014~2016년의 기간으로 2016년 종료됨에 따라 2017년 이후의 중장기 추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내체류형(in-bound형) 인력교류를 실시가 필요하고, 해외파견형(out-bound형) 인력교류는 2명 모두 미국 대학으로 파견하였는데, 파견기관을 다양화하여 인력교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MOU → 학술대회, 포럼 → 인적교류 → 국제공동연구비 수주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로 진화하는 연구역량 국제화 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이 필요함.
- 각 항목별 연구역량 국제화 지표의 향상노력이 필요하고 국제화 모니터링 및 환류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외부전문가와 함께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II

경영 분야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2-1-1. 리더십

□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와 대내·외적 소통 능력

<장 점>

- 기관의 현안문제 선정에 있어서 전 직원 대상의 설문조사나 정부 등의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활용하였으며, 타결해야 할 세가지의 현안과제가 적절하게 구축되었다고 평가됨.
- 데이터공유-외부연구자 연구-결과 제공의 환류에 기여하는 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관장의 비전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음.
- ICT통계정보연구실로 확대 개편을 통하여 데이터 제공 강화 등의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됨.
- 연구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시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됨. 평가 시에 부처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한 점, project mentor제도, 최종보고서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 절차를 활용하는 점 등이 우수하다고 평가됨.
- 기관장은 기관발전을 위한 현안문제 타개를 위해 현안과제를 내외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선정하여 절차의 타당성을 확보함.
- ICT 신성장동력 발굴 및 활성화 정책 지원, 정부3.0 정책지원, 연구자산 보호 및 핵심역량 강화 등 3개의 현안과제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
- 현안문제 타개를 위한 노력으로 정부부처와 ICT 신성장동력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정부3.0관련 사업지원을 위해 통계시스템 구축, 데이터집적 및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 구성원의 연구역량 및 성과관리 증진을 위해 문제점 인식 및 내부진단, 추진전략수립 및 전략수행의 단계적 전략을 수립하였음.

- 미래지향적 과제 발굴·수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ICT관련 3대 정책이슈별 미래지향적 과제발굴을 통해 미래사회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ICT 분야 글로벌 협력 및 통상협상 강화, 한국 ICT 성공경험의 국제공유 및 자문, 해외 선진 기관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및 교육/연수 강화 등을 통한 노력을 기울임.
- 기관장은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 제고와 경영비전 및 목표 공유를 위한 노력과 성과로 공식·비공식의 다양한 의사소통채널, 직급·직종별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약한 부분의 활동을 강화하였음.
- 국가정책 참여 및 지원을 위한 기관장의 대외적인 활동 실적으로 기관장은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기관과의 소통 강화와 국가정책에 참여 및 지원하였으며, 위원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음.

〈단 점〉

- 현안과제들이 정부사업의 지원사업으로 기관의 일상적인 기능과 역할관련 과제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해결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 않음.
- 기관의 재정상황 등 실질적인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노력은 부족함.
- 기관의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의 의제대응 성과 중 기관의 실질적인 노력과 성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기관발전과 홍보를 위한 기관장의 언론대상 대외활동은 기고와 컨퍼런스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선도적 미래 연구가 매우 중요한 ICT 분야의 기관이므로 정부부처의 변화에 따라 기관이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예산 구조개선이 필요함.
- 현안과제들의 경우 구체적인 세부과제와 도전적인 목표설정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연구역량 강화 실적과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에서 기관의 실질적인 성과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언론을 상대로 한 기관발전과 홍보를 위한 기관장의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윤리경영

<장 점>

- 청탁금지법, 감사 기법 등에 관한 교육들이 이루어졌으며 청렴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 규정 및 제도들이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음.
- 연구윤리 관련한 제도와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요구사항들이 규정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음.
- 기관경영의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임직원 행동강령, 내부감사규정, 연구윤리지침 등의 내부 규정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기관경영의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성원 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성과는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내부교육, 관련 직무담당자들의 직무역량교육 등을 중심으로 집중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음.
- 기관경영의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정부패 척결 노력으로 일상감사의 충실화를 통한 사전예방체제를 구축하고, 법인카드 모니터링체계 및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체점검체계를 구축함.
- 연구윤리규정 마련과 실질적 기능 여부는 내·외부 연구수행자의 연구윤리의식 제고 및 연구윤리 위반 방지를 위한 연구윤리지침과 학술용역사업관리지침 등의 규정이 있음.
-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사전예방교육, 자체검증시스템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 적극적임.
- 연구윤리 운영의 환류 실적은 2013~2015년도 3년 연속 연구회의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 결과 위반사례 없음.

<단 점>

- 대부분의 교육이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수행의 윤리경영 관련 교육은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전 직원들의 윤리의식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과 윤리교육을 통해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함.

2-1-2. 책임경영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장 점〉

- 제2 르네상스 시대의 선도, 미래전략 및 분석기능 강화, 국제협력 강화, 조직문화 정착 등 다양한 내용이 성과목표로 반영되어 있고, 경영목표와 실천계획의 연계성이 적절함.
- 기관 당면현안의 도출이 체계적이고 대응수단 또한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점이 매우 우수함.
- 현안 대응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미래지향적 연구를 기관장이 의지를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점이 우수함.
- 협동연구 추진과제 비율이 54%에 달하는 등 외부와의 네트워킹 연계 노력이 좋고, 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과제, 사업 등이 다양한 분야별로 다양한 기관과의 연관 속에 활발히 수행되었음.
- 연구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개도국 ICT 발전을 위해 수립된 목표가 적절하며, 한국정부의 ICT 글로벌 협력 활동 지원이 바람직하며 정책적 반영도가 우수하다고 판단됨.
- ITU, OECD 등 의장단 진출 및 활동 실적이 우수함.
- 평가제도 개선 후 구성원의 만족도를 확보하고 환류한 점이 우수함.

〈단 점〉

- 성과목표의 주요한 부분으로 정부3.0 적극추진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연구원 차원에서 실제로 국가 전체를 위해 혁신적 변화 및 국민의 정부3.0 체감도 증진에 기여한 부분은 없으며, 기관장이 정부3.0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으므로 목표수립에 있어 정부3.0을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함.
- 경영목표 실천계획으로 제시된 '새로운 환경에서의 창의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의 성과지표가 지나치게 나열식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 성격도 성과목표가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인 점이 미흡함.
- 실적보고서에 제시된 실적이 '추진', '지원' 등과 같은 내용에 그치고 있어 목표달성 내용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실적 내용들이 있음.
- 성과목표치의 설정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목표를 100% 달성하였다고 해도 목표치의 도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차기정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ICT 관련 미래선도정책 수립을 위한 구상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정보화 기능이 정부조직 개편에 의해 행자부로 넘어가게 되면서 부처 기능이관이 일어나 정책연구 기능이 존재했다가 없어지곤 하므로, 기관장이 정부 간 소통과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3.0추진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 연구기관에서 이러한 문제까지 다루어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관련정책 및 관련 연구분야가 조정·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업 가능성이 많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협업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벤처패널구축에 있어서 벤처의 특성상 시계열적 표본유지가 어려우므로 패널자료의 품질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목표치의 설정근거를 제시하여 도전성을 명백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각 목표별 실적으로 제시한 연구과제들은 최소한 연구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공동연구과제들은 거기에 덧붙여 협력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을 명시해줄 필요가 있음.

□ 책임경영 이행 정도

〈장 점〉

- 연구회와 연계된 협동연구과제 수행 실적이 우수하고(다년 과제 4건: 계속 과제 2건, 신규 과제 2건), 연구회와의 협조 속에 신규 연구과제 1건을 발굴한 점이 우수함.
- 연구회가 추진한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및 국제학술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음.
- 시니어 중심의 평가시스템을 변경하여 계량화 중심에서 실간 평가를 트고 실장의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주니어 인력도 공평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하여 성과의 차별화가 가능하게 됨.

〈단 점〉

- 임금체불 사태 발생으로 인해 소속 인력의 사기저하를 막지 못했음.
- MOU 체결의 방향과 실제 성과로 OECD, OVUM 등과 연구교류협력 체결을 하고 있고 세미나 협력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협력내용이 다소 단순하여 발전적 확대 및 내실화가 필요함.
- 연구인력의 해외연수는 2명 실시로서 전체 연구원 규모와 인력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미흡함(차년도 역시 2명으로 계획되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기금 운영체제 등 본 연구원의 독특한 구조로 인하였다고는 하나, 임금체불 사태의 발생을 막지 못했으므로 추후 기획재정부, 연구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구조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함.
- 데이터 개방을 선도하여 외부연구자 및 일반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선도 연구기관이 되어야 함.
- 본 연구기관을 통한 정부3.0 추진 확산 실적이 없으므로 향후 정부3.0 추진 확산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이 필요함.

2-1-3. 자율지표

□ 기관장 중점 추진과제①

〈장 점〉

- ‘ICT전략연구실’ 및 ‘국제협력연구실’의 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내부협력을 비롯하여 외부 학계, 연구계로 이루어진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연구체계를 구축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비즈니스 모델의 법률적 검토가 미흡한 스타트업에 대하여 법률자문체계를 수립·운영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춘 노력은 긍정적임.
- 소득수준 및 생태계 발전수준에 따른 체계적인 협력대상국 분류를 통하여 지원기관 및 스타트업, 정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기본 틀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 노력은 긍정적임.
- 벤처·창업 생태계 글로벌화를 위한 자문단의 구성원을 주제별, 주제별 분과로 구성하고 산·학·연·관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다양한 자문의견과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 실적이 인정됨.

〈단 점〉

- ICT 벤처·창업생태계 연구와 정책대응을 위한 내·외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나 협력 전략 수립 외에 정량적 평가 목표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음.
- 연도별 수행체계 및 환류활동 등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 부족함.
- 국내 ICT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정책 채택 여부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반의 운영이 정책 개선에 집중되어 있어 ICT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 발굴을 위한 노력 및 성과가 미흡

한 것으로 판단됨.

〈개선 및 건의사항〉

- 균형 있는 정량·정성 평가가 필요하며, 정책 지원 및 법률자문 등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정량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협동연구체계를 구축하고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중복적인 연구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목표 및 목적의 수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각 협동연구체계를 조율할 환류 활동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벤처·창업 관련 제도개선 연구반의 구성 요건 및 운영 방안을 체계화하여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및 ICT 환경에 알맞는 새로운 정책 제시를 위한 연구단체로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음.

□ 기관장 중점 추진과제②

〈장 점〉

- ICT 관련 조사기관의 분산에 따른 중복과 일관성이 결여된 통계의 조정 및 체계적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ICT 통계생산체계 개선 및 통계생산 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한 것은 적절함.
- ICT 시장의 급속한 진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ICT 통계 컨트롤 타워 구축 및 운영으로 통계조사 중복 조정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통계 기획·관리·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통계청 승인통계의 기여도 평가 및 미승인 통계에 대하여 품질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ICT 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인.
- 가구패널조사 CAPI 방식 도입, 데이터 검수 강화, 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방송산업실태조사 등 자체 생산 통계의 관리를 강화하여 통계생산 역량 강화를 수행한 실적이 인정됨.
- 기존의 방송 분야뿐만 아니라 ICT 및 인터넷 경제 통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KISDI STAT에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 격주 간으로 심층분석 보고서를 발행하여 전년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한 실적이 인정됨.

〈단 점〉

- KISDI STAT Report를 발간하였으나 실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환류활동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CAPI 방식 및 데이터 검수 강화 등 자체 통계조사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수행한 다양한 노력들은 시스템적인 방법으로 적절하나, 체계적인 연구원의 통계역량 강화는

확인하기 어려움.

- 자체 통계 외에 ICT 및 인터넷 경제 관련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ICT 통계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주요 ICT 품목 중 이슈가 있는 분야만을 선택적으로 분석한 것은 통계의 다양성 및 신뢰성 강화 노력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개선 및 건의사항〉

-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ICT 통계사업을 위하여 기관에서 생산하는 각종 통계 및 관련 자료의 이용자 현황, 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 ICT 품목에 대한 선택적 이슈 분석이 아닌 종합적 통계 분석의 수행이 필요함.
- 한국미디어패널 학술대회의 산학연 공동연구 실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명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장 점〉

- SWOT기법을 활용하여 외부환경 분석과 내부역량 분석 그리고 체계적으로 향후 전략방향을 모색하였음.
-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운영 변화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간담회/연구반 등 현안 대응조직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유관기관과의 활발한 네트워크활동이 이루어짐.
- 조직목표와 부서의 성과목표가 체계적으로 연동되었으며 운영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전직원 설문조사, 정부 및 산학연과 개방형 연구체제 구축 등을 통해 내부와 외부 고객과 체계적으로 소통노력을 시도하였음.
- 성과관리 전담반을 운영하여 경영목표, 실행전략, 세부실행과제, 성과목표 등을 설정하여 과제추진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함.
- 조직목표 달성 평가를 위해 경영목표 TF와 평가관리팀을 운영함.

- 환경변화, 경영목표, 정부정책을 반영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인력운용을 하고 있음.
- 기관의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다가 3년으로 단축하고, 매년 수정 보완하여 운영함.
- '15년 기관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외부심사위원 참여비율을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인성검사를 의뢰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함.
- 기존 우수인력 유지를 위해 가족동반 이주를 희망하는 직원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립을 추진하여 '17년 운영을 준비함.
- 연구경쟁력 확보를 위해 박사급 인력비중을 위한 계획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NCS에 기반한 채용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려고 노력함.

〈단 점〉

- 내·외부 고객요구에 부응한 제도개선 및 운영 실적과 관련하여 외부고객 분석이 주로 정부부처, 유관기관 중심으로 한정되었으며, 국민의 요구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직운영 반영 노력은 미흡함.
- 일부 제시된 실행과제가 2015년 보고서와 유사하여 2016년도에 차별적인 실행노력과 성과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음.
- 조직 개편, 내외부 수요조사에 부응한 성과에 대한 결과(정성 및 특히 정량)가 명료하게 기술되는 부분이 미흡함.
- 연구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기적으로 박사인력 비중을 65%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목표 수립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연구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박사급 인력충원을 증가시키려는 계획은 예산확보 측면에서 근거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 채용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위원의 참여 비율이 다소 미흡함.
-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MOU 체결 등 타기관 간 인력교류 실적이 부진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외부고객의 범주를 대국민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내부 및 외부 고객 수요조사를 제도화할 것을 권고함.
- 비정규직 직원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은 중장기 재무예산 계획 등과 보다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수립할 것을 건의함.
- 채용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위원의 참여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함.
- 지역 대학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 개최 또는 연구원의 출강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연구원과 학교, 타 기관 간의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조직 구성원의 역량 및 인사관리 적정성

〈장 점〉

-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통해 중장기 교육훈련 로드맵을 도출하고 교육프로그램에 연계하고자 노력함.
-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계획수립 시 구성원의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함.
- KIRD 기본교육 참여 의무화를 통해 기초 역량 강화와 함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음.
- 기관 구성원의 직급·직종별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교육·연수 결과를 계량화하여 평가, 보상, 이동/배치 등에 연계함으로써 효과적인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
- 2015년 대비 교육훈련 건수와 교육훈련비가 증가하였음.
- 시차출퇴근제와 스마트워크근무제의 유연근무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6년 정부 스마트워크제 이용률에서 공공기관 중 1위의 운영 성과(이용건수 3,104건)를 나타냄.
- 유연근무제 시행규칙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시행을 위한 적절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연구직과 비연구직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였고, 지원부서 업적평가의 평가기준을 정량화하여 평가시스템 시행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함.
- 개인업적평가 우수기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평가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함.
- 업적평가시스템과 관련하여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활동에 반영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냄.
-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업적평가 이의시스템을 전산화함으로써 평가 공정성을 제고함.
- 변환점수 평가방식 운영 및 상대평가를 통해 평가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려 노력함.

- 업적평가시스템 시행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노력을 보임.
- 평정 대상 제외자 적용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음.
- 업적평가 이의신청의 전산화를 통해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시킴.
- 성과연봉의 차등폭을 높여 실질적 성과연봉제 운영을 위해 노력을 함.

〈단 점〉

- 기관의 비전과 인재상을 연계하여 핵심역량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인재상과 교육체계의 정합성이 미흡함.
- 교육훈련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였다고 하여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
- 직종 및 직급에 따라 단계별 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로드맵이 체계적으로 기획되지 못함.
- 구성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이 복지, 급여, 근무여건, 인센티브,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획되지 못하고 이행이 부족함.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사례 및 운영 실적, 성과 연계 등에 대한 제시가 없음.
- 연구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의 구체성이 미흡함.
- 연구직과 비연구직간 교육훈련비 배분과 집행의 전략적 관점이 미흡함.
-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가 매 연도별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해 구성원 교육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함.
- 구성원 역량강화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인재상과 연계성이 부족하여 프로그램 이행 실적의 적절성이 부족함.
- 교육 만족도조사가 실시되었으나 교육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환류되지 못하고 1인당 교육훈련비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음.
- '16년 스마트워크제 이용실적과 비교하여 시차출퇴근제 이용 실적은 다소 미흡하며, 주로 부연구위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반면 원급 구성원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함.
- 구성원들이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미흡함.
- 유연근무제 실시 실적이 부족하고 만족도 조사 등 사후평가를 통한 제도운영의 환류 체계 구축이 부족함.
- 안식년(연구연가) 자격요건에서 근속연수뿐만 아니라 업무실적평가의 일정수준을 최소요건으로 규정하지 못해 대상자 설정의 적절성이 부족함.
- 업적평가제도의 기본방향이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으

나, 평가결과를 육성/개발에 연계시키기 위한 제도와 프로세스가 미흡함.

- 연구직 부서장의 경우 실질적으로 원장 평가의 1단계 평가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하고 관찰 의견을 반영하는데 미흡함.
- 비연구직의 업적평가 중 업무수행실적에서 제안실적의 반영 비중이 3% 정도로 기관의 인재육성 비전과의 정합성이 미흡함.
- 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구성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관련 제도(예; 평가 만족도 조사, 평가 Audit 등)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의 비전, 인재상에 부합하는 핵심역량을 정의하고, 이와 연계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제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것을 권고함.
-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중장기계획과 구성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내용을 충실하게 기술할 것을 권고함.
- 직급·직종별 체계적인 교육·연수프로그램과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운영할 것을 권고함.
- 교육 운영 현황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교육프로그램 개선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을 권고함.
- 교육훈련비 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훈련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스마트워크제와 시차출퇴근제 외에 추가적인 유연근무제(예; 집약근무제, 근무시간 선택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
- 원급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차출퇴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함.
- 유연근무제는 자율근무이므로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태관리에서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고 이를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할 것을 권고함.
- 안식년(연구연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실적평가의 일정수준을 최소요건으로 규정하고 결과보고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건의함.
- 업적평가에서 정량과 정성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하고, 정량평가의 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함.
- 부연구위원 이하 일반직원의 역량 개발의 중요성 및 육성/개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역량 평가 비중을 확대 운영할 것을 권고함.
- 업적평가 시스템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 분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평가시스템 개선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 업무역량 및 태도 평가에서 다면평가제도를 보완하여 활용하는 시스템 개선을 건의함.
- 업적평가시스템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스템 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할 것을 건의함.

- 평가적용 대상자 제외에서 노조전임자 2명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므로 1명으로 서술할 것을 권고함(time off는 2,000시간이므로 1명이고, 2명이 1/2씩 사용으로 서술).
- 승진자격 최소요건으로 최근 1년간 평가 결과 B등급 미만인 자 승진제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에 대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고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볼 것을 권고함.

□ 연구기관 보안관리의 적정성

- 정보보안 예산 확보, 기관 홈페이지 취약점 관리 등을 수행함.
- 정보보안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기관의 관심 제고 및 정보화사업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사이버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함.
- 업무용 메일 및 상용메일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망 분리 시스템 확대 적용이 필요함.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장 점〉

- 자체수입 부족에 따른 재정상황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3% 인상요구가 있었으나, 지속적인 실무교섭과 본 교섭을 통해 전년 수준으로 동결함.
- 노무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노무정보를 각종 협의체나 계시관을 통해 확산함.
- 노사협의회 미구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원장-사무국장-노조지부장 사이의 수시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지혜롭게 극복함.
- 노사 간 갈등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채널(주니어보드, 열린 대화, 확대간부회의)을 활용하고 있고, 노사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행해지고 있음.
- 2016. 12. 30.로 효력을 상실하는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공동교섭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법정 면제시간을 준수하였고, 노동조합 지원 내용이 적법함.
- 경영·인사 관련 방만경영 체크리스트에 위반하는 단체협약 상의 규정이 없으며, 경영권이나 노조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노사 간 교섭이 존재하지 않음.

〈단 점〉

- 고충처리위원이 사무국장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원회 충족기준에 미달하고, 고충신청인과 고충내용의 비닉성 유지에 한계가 있으며(노사간담회, 직원설문조사를 통한 고충 접수), 고충사안이 편의제공 사안에 치중되어 있음.
- 노무관리 참여 교육 중 노무 관련 교육 비중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13건 중 5건), 교육참여-교육결과의 환류체계도 상대적으로 미흡함.
- 원장-직원, 직급별·부서별 간담회가 크게 감소되어 수평적·상향식 소통체계가 위축 됨.
- 노사 상생 및 협력증진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임활동이 빈약함.
-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현안 쟁점들이 노사간담회를 통해 제한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노조원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처리 체계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여성 1인을 포함하는 3인의 고충위원으로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 노무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가급적 인사업무로부터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음.
- 노사협의회 구성이 시급하고, 쌍방향적 소통채널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노사협력증진 프로그램이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다양화,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단체협약 및 지부협약 체결 시 인사, 경영, 복리후생 부분의 체크리스트 위반사항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2-2-3. 복리후생 운용의 합리성

□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실적 정도

〈장 점〉

- 퇴직금, 교육비, 보육비, 의료비, 경조사, 기념품 지급 관련 규정 상 체크리스트 위반사항이 없음.
- 일상감사를 통해 복리후생 관련 방만경영 위반 사례 발생 여부를 확인함(기관장 최

중 결제 전 감사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여부 확인).

-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관련 방안경영 정상화 이행 실적이 정부기준을 충족함.
- 병가, 청원휴가, 휴직, 유가족 채용 관련 규정 상 체크리스트 위반사항이 없음.
- 복무·인사 관련 방안경영 정상화 이행실적이 정부기준을 충족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퇴직금지급규정 제4조의2(지급제한)와 관련한 분쟁은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체크리스트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나, 정부지침에 따라 개정할 필요성은 있음. 사전 및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가 있음.

2-3 보수 및 예산 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장 점>

- 중점연구과제는 국정과제와의 부합성, 기관 설립목적, 정책사회환경 변화와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다수의 원내절차를 거쳐 선정되고 있음 2016년도 중점연구과제 예산 집행률은 91%로 적정하게 집행됨.
- 2016년도 연구사업비 편성내역은 정부제안과제가 53%, 수시연구과제가 10%, 기초연구과제가 28%로 모두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함. 2017년도 편성계획도 적정하게 편성함.
- 수시연구사업비의 기관전용사례가 없으며, 외부위탁 비율은 0%로 적정하게 편성됨.
- 연구개발적립금사업은 이사회 승인내역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집행률도 92%로 적정하게 집행함.

〈단 점〉

- 2017년도 이후 중점연구과제 중 연차과제들의 연차별 사업내용을 구체적인 기술이 다소 미흡하며, 사업내용에 맞추어 예산배정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 2016년도 연구사업비 예산집행률은 총계는 90%로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기본과제가 87%로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음.
- 수시연구사업비의 미배정액이 전체 예산의 40%에 달하며 전체적인 집행비율도 47%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연구개발적립금 집행실적 중에 80%에 미치지 못한 사업도 있음.
-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단계별 투명성 확보 시스템에 따른 구체적 실적을 제시하지 않음.
- 연구적립금 운용에 있어서 사무국에서 목표수익률만 설정하고 별도의 구체적인 투자계획 없이 연구적립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금융기관 선정 시 공개경쟁 공모방식을 취하지 않음.
- 연구적립금관리위원회에 적립금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보고가 누락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이 부재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점연구과제의 연차별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업내용에 맞추어 예산배정근거를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함.
- 수시사업 예산 미배정액이 감소하도록 사업예측과 예산편성 노력이 더욱 요구됨.
- 연구개발적립금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전 과정에서 연구원이 시스템 개선, 내부지침 보완 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실적을 만들어 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 필요함.
- 연구적립금 운용에 있어서 시장금리 환경을 반영한 목표수익률의 합리적인 조정, 연구적립금관리위원회 구성 시 외부인사 과반수 참여, 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투자상품 및 규모, 투자기간, 수익률 등에 대한 기준 마련과 공개경쟁 공모를 통한 투자기관 선정, 연구적립금 운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연구적립금 운용의 안정성과 적정성 확보가 요구됨.

2-3-2. 보수체계의 적정성

□ 총인건비 관리의 적정성

<장 점>

- 총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함.
- 2015년 대비 2016년도 총 인건비 인상률은 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준수함.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결산잉여금 처분 및 퇴직급여충당금 편성·집행의 적정성

<장 점>

- 결산잉여금(3,762백만원)은 ‘2016년도 예산집행지침’과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하고, 차기 이월되었음.
- 퇴직급여충당금 편성·집행은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정성

<장 점>

- 성과연봉이 총 연봉의 31%로 적정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근속연수와 연동된 자동승급 등 기본연봉의 자동적인 인상효과를 갖는 수당은 없음.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수당은 성과연봉으로 전환하였음.

- 성과연봉의 간부직, 비간부직 차등배분비율은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인원배분비율은 비간부직의 경우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 기준도 간부, 비간부 모두 2배 이상의 차등지급을 하도록 적정하게 설계됨.

〈단 점〉

- 기본연봉은 비누적식을 적용하고 있어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음.
- 기본연봉의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도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노사협의를 통해 기본연봉을 누적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본연봉의 차등지급률과 인원배분비율을 먼저 개선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실적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함.

□ 임금피크제 정착 노력과 운영 효과

〈장 점〉

- 2015년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적용대상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있음. 임금조정기간은 정년직전 2년이며, 제도적용 1차 년도에 총연봉의 90%, 2차 년도에 80%의 지급률로 설계되어 있음. 적절한 직무개발노력을 기울여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2016년도에 발생된 3명의 별도정원에 맞추어 신규채용을 달성하여 기준을 충족함.
- 신규채용자에 대한 채용조달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절감분, 퇴직자와 신규채용자의 임금차액을 활용하도록 설계하여 기획재정부의 권고안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장기 신규채용에 따른 소요재원 충당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됨.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내·외부 감사결과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내·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정무위원회(연구중단자에 대한 부적절한 경비지원 문제), 예산결산위원회(국외업무 여비 편성 규정 미준수 및 과다 편성 여비 감액)의 지적사항을 개선 조치함.
- 감사직원 2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제규정 및 업무분장요령에 의거하여 감사의 주요 업무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감사인력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이 주최하는 교육에 참가한 실적이 인정됨.
- 분기 1회 원장과 비상임감사의 업무협의를 시행한 성과가 확인됨.

〈단 점〉

-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 관련 교육이 주로 ‘안내’, ‘게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 내용이 효과적으로 직원에게 전달되었는지 다소 의문시 됨. 집합교육의 횟수 강화 및 교육 후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도 점검 활동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 관련 교육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비상임감사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면보고를 포함하여 최소 월 2일 이상 비상임감사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으나, 감사 역량 및 성과의 제고 등을 위하여 월 2일 이상 기관 근무의 형태로 비상임감사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감사실 직원이 실질적으로 중간 이상의 근무평가 등급을 받는 등 감사 직원이 우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 시, 감사 규정에 감사실 직원의 근무평가에 있어서 우대 조항을 명확히 제정할 것을 제안함.

□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연구결과의 논리성/명료성과 정책기여도 향상을 위해 검토위원회(Review Committee), 동료평가(Peer Review), 운문작업, 연구보고서 평가단계에서 정부부처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이 인정됨.
-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등 국정과제에 참여하는 대상의 폭을 넓혔다는 점이 인정되며, 수시연구과제 선정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노력이 인정됨.
- 내부 우수인력의 사기진작 및 이탈방지를 촉진하기 위해 2주간의 단기연수, 직장어린이집 개원 등은 의미 있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으로 평가됨.
- 정부기관의 의견수렴 강화를 위해 기존 중간평가를 16년 중간/최종 평가까지 확대하고 정부평가위원을 24명으로 대폭 확대한 점이 인정됨.
- 연구협력회의, 워크숍, 전문가초청세미나 등을 통해 과제수행 과정에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였으며, KIDSI STAT을 통한 자료 공유 및 제반 활동(예: 서포터즈 운영 등)을 수행하는 등 고객에게 재생산된 정보를 제공하고 환류 받는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됨.
- 전년도 지적된 성과연봉 및 능률성과급 인원배분비율은 기준에 맞게 개선됨.

〈단 점〉

- 연구보고서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정책기여도 제고 활동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정책 기여 측면에서의 성과를 정확히 가늠하고 모니터링 하는 활동은 부족하다고 평가됨.
- 중장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실적을 4배 이상 증가시킨 점은 인정하나,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연구원들의 연구역량을 얼마나 상승시켰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교육성과 지표를 도출하여 교육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누적식 기본연봉 체제로의 이행은 아직 노사 임금실무교섭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로서 미 이행된 상태임.

〈개선 및 건의사항〉

- 대외홍보가 홈페이지, SNS 등을 중심으로 다소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일반인(국민)이 원하는 수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러한 기관의 역할이나 연구성과 등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형 홍보활동(포럼, 세미나, 사회봉사활동 등)을 전개할 것을 제안함.

- 노조가입률이 50% 이하라는 상황 속에서 온전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은 이해되나, 좀 더 노조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장 점>

- 2016년 연말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 3.0%를 준수하고 있으나, 8개월 실적으로 평가 기준의 일부를 준수하고 있음. 2016년 평균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61%임.
- 장애인의 고용형태가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은 편임. 능력에 따라 장애인에게도 다양한 보직기회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임.
- 장애인 채용 시, 서류 및 면접 전형에서 득점의 3%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조항을 명문화하고 있음.

<단 점>

- 2016년 연말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고 있으나, 2016년 장애인 신규 채용 실적은 없고 지속적인 장애인 신규고용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이 미흡함.
- 장애인기업 물품구입비율이 11.0%로 2015년의 27.1%보다 16.1%p 감소함. 구매금액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나 외부구매총액 증가에 따른 비율 감소로, 외부구매총액이 증가한 만큼 장애인기업 물품구입도 증가시킬 필요 있음. 장애인 연계고용제도 활용 실적이 낮아짐.

〈개선 및 건의사항〉

- 평가대상 기간인 연말 현재 장애인고용률이 3.0%를 달성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달성 상태가 연간 10개월 이상 지속되도록 채용노력을 기울일 필요 있음.
- 장애인 채용을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력을 유지하고,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하여 장애인을 추가 채용할 필요 있음.
- 장애인 채용 시 장애인 우대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가점(현재 3점)을 상향 조치할 필요 있음.
- 인쇄 및 사무용품 구입 이외에 소모성 자재(MRO) 제품에 대한 폭넓은 구매를 통해 장애인연계고용제도 활용실적을 개선할 필요 있음.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장 점〉

- 청년인턴 채용계획 8명 대비 13명(연구직 7명, 행정직 6명)을 채용하여 계획 대비 163%를 달성함. 2016년에 청년인턴 3명이 퇴직하였고, 3명을 충원함.
- 근무관리 및 취업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청년인턴 관리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음.
- 청년인턴에 대한 교육지원(연구역량 강화)이 우수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우수인턴 1명에 대해 계약직 입사기회를 제공하여 계속 채용을 통한 업무수행에 대한 동기부여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단 점〉

- 청년인턴에 대한 멘토링 및 교육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청년인턴의 직무소양 및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채용 시 청년인턴에 대한 우대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직 및 행정직 인턴에 대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직무역량과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함.
- 청년인턴의 내부 채용 시, 근무평가 및 실적에 따라 우대하고 세부적인 우대조치 사항(가점부여, 서류전형 면제)을 명문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장 점>

- 기관 정원 총 132명 대비 7명의 국가유공자를 고용하여 우선 고용률 6%를 달성함으로써 정부기준을 충족하였음.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 채용정보를 활용한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펼치고 있음.
- 2015년 신규 채용한 국가유공자 1명을 특별채용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관련 제도를 내부규정(인사관리요령 제8조)에 명문화하였으며, 서류 및 면접전형 단계에서 각각 만점의 5%, 10% 가점부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비율을 달성하고 있으나, 지방보훈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직접적인 대상자에게 구인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함.

□ 휴가장려 및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운영의 적정성

<장 점>

- 휴가장려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총 3회에 걸쳐 휴가사용을 권장하고 그 절차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관리노력을 기울였음. 이러한 노력의 결과, 휴가소진율 92%라는 실적을 달성하였음.
- 출산전후휴가(4명), 배우자 출산휴가(6명), 육아휴직제(6명)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신청자 없음)가 복무요령(제 22조, 제24조 및 제25조)과 인사관리규정(제28조 및 제29조, 제30조)에 명문화(2016년 7월 개정)되어 있으며 규정을 통해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 그 외 유산한 직원에도 유급보호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출산 관련 휴가를 지원하고 있음.
-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이 복무요령(제24조) 및 인사관리규정(제28조의 2)에 명문화되어 있어 태아검진시간 청구(3명) 및 가족돌봄 휴가(1명), 여성보건휴가(1명), 임신근로자 단축근무(신청자 없음)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활용 실적은 미비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함.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전환 정도

〈장 점〉

- 비정규직 비율이 25% 정도로 높지는 않으나 비정규직 인력운영 계획(2016.3)을 마련하여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별정직 관리요령 및 인사관리요령에 비정규직의 처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및 처우에 대한 차별적 조항은 없음.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과 교육훈련, 복리후생적 현물, 금품, 편의시설 및 휴가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은 없음.
-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이 1명이 있으나 무기계약직 전환에 계획(기획재정부 승인인원 0명)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부분임.
- 기관 자체 노력에 의하여 비정규직 성과우수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음. 2016년도 신규채용 6명 모두가 내부 업무능력이 검증된 계약직 직원 중에서 채용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장기 인력운용 계획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비정규인력 운용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